



##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



윤 덕 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정책 방향

21세기는 과거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대라고 한다. 즉, 21세기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단절적 변화의 시대이며, 기존의 강점이 미래의 약점으로 바뀌는 패러다임 역전의 시대라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기능하는 척도가 물질 자원에서 인적자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길러내야 하는 대학의 역량에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 앞에 처한 현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반성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학은 배출하는 인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와 기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않은 평가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나 UNESCO 등 국제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수준은 국제사회로부터 부러움을 받을 정도인데 반해,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는 불행하게도 낮은 수준이다. 공부하는 대학, 실력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지역발전 시책이 주로 시설·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에 치우쳐 인재, 기술, 정보 등 소프트 인프라가 지역에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지원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실제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지역 역량도 부족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결국 우리 국가성장의 한계를 노정시키게 되었고, 사회통합마저 저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2003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2003. 7. 3)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에서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고등교육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계적 수준으로의 대학교육·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 축으로 지방대학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범정부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고등교육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계적 수준으로의 대학교육·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교육·연구의 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대학원 및 연구소 집중 육성, 기초학문분야 보호·육성, 대학 특성화·다양화,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 강화 등이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 II. 세계수준의 대학교육·연구 역량의 확충

###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지난 5월,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폐지”하여

2004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사전 정원승인 요청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잦은 입시정책의 변화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행 학생선발 제도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학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전형방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가자 한다. 대학에서도 고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도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집행적 업무는 산하기관이나 민간에 적극적으로 위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대학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 2. 현장 적합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인력양성

지난 6월 전경련이 주최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과 실현방안’ 세미나에서 기업측이 발제한 자료를 보면 대학과 학생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감성적인 면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 지성적인 면에서 창의적이며 자기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 기술적인 면에서 어학과 정보처리 능력을 구비한 자기표현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천력과 행동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기

업은 글로벌화한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역량을 지닌 인재, OECD 등에서 흔히 말하는 '기본적 역량(Basic Skills, Key Skills)'을 지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외부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개별학과 중심으로 구태의연하게 운영되는 우리의 대학교육에 대해 기업들이 불만을 소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대학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교육과정운영에서 벗어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바꿔나가야 한다. 기업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수요인력에 대한 요구 내용과 수준을 대학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설 것이며, 경제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할 계획이다. 대학 - 산업체 - 교육인적자원부간 의사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인력수급 전망 등에 대한 정보가 바로 대학에 전달되어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및 정원 책정, 학과 운영 등에서 신호기능(signaling)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3. 국가차원의 인력수급 중·장기 대책 마련

지난 2002년 12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전망과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동 보고에 기초하여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대학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제공되어질 것이다.

### 4.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제발전단계가 성숙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인적자원의 양적 투입에 따른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

며, 원천·응용기술 등 신기술 개발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경제발전의 핵심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1년 11월에 '국가전략분야(6T : IT, BT, NT, ST, ET, CT)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2002년 4월에 수립하였고, 참여정부의 출범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지난 6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6T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03년~'07년까지 약 1조 9,21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수인력을 유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우수대학생 장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전략분야 관련 국립대 교수정원을 지난 2년간 412명 증원한 바 있고,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키로 하여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분야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학제적 교육과정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학이 이를 적극 추진할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에 결맞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5. 우수 R&D 인력 양성 및 기초학문의 인프라 구축

1999년부터 추진해온 BK21사업은 시행 초기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계획했던 2005년까지 BK21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지방대학육성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학문분야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한시적인 사업('02년~'04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문육성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표 1〉 전략분야별 인력수급전망(2001~2005)

(단위 : 명)

분야	신규수요	양성인력	과부족(%)	대상분야
IT	270,525	138,851	△131,674(48.7)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BT	9,470	3,080	△6,390(67.5)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NT	4,200	2,415	△1,785(42.5)	나노전자공학, 환경·에너지, 나노소자, 의료·바이오, 나노측정
ET	7,084	6,417	△667( 9.4)	통합환경관리, 생태계보전, 사전오염예방, 지구환경·기후 변화
ST	1,109	441	△668(60.2)	발사체, 위성체, 항공전기·전자, 항공재료
CT	116,100	70,500	△45,600(39.3)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음반
계	408,488	221,704	△186,784(45.7)	

\* 출처 : 국가전략분야별 인력양성추진반 보고서(2001. 8)  
\* 인력양성 숫자는 학사이상 인력임.

## 6. 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외에 법학·의학·경영학 등 고급 전문인력을 대학원 단계에서 양성하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이미, 의학분야의 경우, 41개 의대 중 10개 대학이, 11개 치대 중 6개 대학이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하여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러한 선도 대학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외에, 국제경쟁력 있는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경영전문대학원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중단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의를 재개하였다. 앞으로, 교육혁신위원회 등을 활용,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의학, 법학, 경영학 외에도 다학문분야(Multi-disciplinary),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도 적극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전문대학원 중심의 인력양성 체제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면 우리나라 인적자원

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됨은 물론, 대학입학 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문직업분야 진입경쟁을 완화하여 학부 및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Ⅲ.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서 지방대학의 육성

참여정부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차별형 지방화'의 달성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핵심요소인 사람과 지식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학벌주의 및 취업기회 상실로 우수인재는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더하여 지방의 혁신역량은 취약하고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모든 혁신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지역관련 정책의 범부처적 연계 등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혁신의 중심

에 지방대학을 두고 있다. 지방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대학이 주도적으로 나서 기업·지자체·NGO 등 지역에 산재한 혁신주체들을 Network화하고, 이들이 지역혁신 창출에 체계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경제, 산업, 문화 전반에 걸친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1. '지역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지자체·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지방대학 지원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며, 지역주도의 사업으로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ilot 성격의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혁신체계(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과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추구하여 지역혁신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의 추진 절차나 재정지원 방식 등에 있어서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방대학 지원사업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지방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와 각 부처의 사업을 연계·조정하여 범국가적인 지방대학 육성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지방에 투자하는 각 부처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체, 지자체, NGO, 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단을 구성하되, 사업단에서 지역의 산업·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계획을 마련

하도록 하고 지역혁신협의체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가 선정·지원하는 분권적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인재의 양성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인재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 인재의 지방 정착,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로 전환하게 하는 Turning Point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 ■ 대학 구조조정

이미 수도권과 국공립대학의 정원은 동결되었으며, 대학은 이젠 그간의 백화점식 학과운영 방식을 버려야만 한다. 스스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해 나가고 수요가 적은 부분은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규모를 감축하는 자구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간·대학내 구조조정의 노력을 통해서 대학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 ■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공포(5.27)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그동안 산학협력을 어렵게 했던 장애물들이 제거되었고, 대학 중심 산학협력 활성화의 법적·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대학에 법인격을 갖게되는 '산학협력단'을 적극적으로 설치·활용한다면 산학협력에 따르는 계약 체결, 독립된 회계관리, 연구 결과의 지적재산권 취득 등이 가능하며,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부지 내에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협력연구소 제도를 도입하였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기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학교기업의 사업종목, 회계 등 구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04년 2월 까지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계획임). 또한, '연구전담교수', '강의전담교수' 활성화 등 교원 인사 운영의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연구에 있어서도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대학차원에서도 연구실적 위주인 기존의 교원평가체제를 개선하여 교수들의 교육실적 및 산학협력 참여 실적이 업적평가·승진·보수 등에서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안정적 고등교육재원 확보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이 고등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가칭)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 기타 제도개선사항

현재 영세한 대학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지난 6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이공계 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범정부적으로 구성하여 대책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부처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대학에 대한 R&D 지원이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사운영의 다양화와 유연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 도입과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간 공동학사운영, 협동과정 운영 등 대학간 교육과정 연계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며, 성인 대상의 정규교육과정인 '성인학습과정'의 도입 등도 검토·추진하여 대학이 중등교육 이후 성인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방대학의 우수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고, 지방대학 학사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편입학제도 등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고자 한다. **대학**

#### 윤덕홍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였고,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공동의장, 참여연대 자문위원, 대구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현대를 움직이는 사상들』, 『현대사회의 종합적 이해』, 『한국사회의 변동』 외 다수가 있다.